

### “6개월간 최대 300만원 받으며 구직”

# 취업 취약계층에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달부터 마케팅 집중 진행 대학 등서 상담 서비스 진행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 등 구직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하

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된다.

제도 중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합쳐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작년 43만2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28일 기준 12만3000명 신청자 가운데 10만60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제도를 설명하고, 참여 후기 등을 모집한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과 도서관 등 청년 취업 공간, 대학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 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 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군기, 군사학과 제복부터 바로잡아야 산다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최근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비밀과 정보를 팔아치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군초기 공산주의에 오염된 장교들이 북한으로 대거 월북했던 사건이 떠오른다.

‘군기’는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군인의 본분’과 ‘정당한 명령’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올바른 군복 착용’은 군기유지의 기본이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들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

‘군기’는 2019년 11월 개정 전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서는 ‘제2장 강령’의 제4조 4항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시됐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는 ‘제3장 군인의 기본권’보다 후순위인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에 언급된다. 이마저도 ‘군기’에 대한 정의는 빠져있다.

‘아무나 쉽게 뽑아 정족수만 채우자’라는 식의 사고가 군에 팽배하기에, 군당국은 군복착용이나 군인에게 맞지 않는 언행 등의 군기위반을 가볍게 여긴다. 군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과 군사학과를 비롯한 민간교육기관도 다를바 없다. 전국에 군사학과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국방부와 각 군에 질의를 수 차례 넣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 교육부도 ‘국방부 소관’이라는 입장만 보였다. 군기 교육의 조기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 전,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후배들과 뛰고 구르는 현장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육군 학생군사학교 교장(소장)은 기자에게 “군사학과의 무분별한 제복착용이 우려된다. 제복의 의미를 ‘땀’으로만 착각할까 두렵다”며 “제복 속에 담긴 ‘엄정한 군기’를 그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며칠 전 풀어헤쳐진 정복과 답수룩한 머리를 한 청년들을 봤다.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해병대사령부와 협약을 맺은 인천시 소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지난 26일 인천시 부평구 일대를 풀어헤친 해병대 정복차림으로 활보하는 해병대 협약고등학교 학생들(왼쪽)과 군인복제형 등 군의 규정상, 민간인 신분은 군사학과 학생이 부착할 수 없는 약장을 단 4년제 대학 군사학과 학생. /문형철 기자

해병대 병 과정을 거쳐 전문하사로 복무하게 된다.

경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군사학과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제복을 연상케 하는 제복을 학생들에게 착용시키면서, 군인복제형(대통령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수들이 앞장섰다.

2016년 12월 국회에 출두한 조여옥 대위가 정복에 패용했다가, 자격 없음이 뒤에 알려져 망신을 샀던 한 줄짜리 그약장이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태권도 단증을 비롯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약장을 달게했다”고 설명했다. 군사학과부터 군기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물론 군사학과 나름의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 학생들을 잘 이끄는 교수들도 있지만, 이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군당국은 군사학과를 통해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교육부는 군사학과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모집 등의 창구로 활용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군사학과 제복을 금지하던가 정부예산으로 통일된 제복을 제정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출신자들은 ‘사관생도 과정’이나 ‘학군사관후보생’만큼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들 군사학과 학생들의 제복을 정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제복의 가치와 군기의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captain@

## MZ세대, ‘창업 목적’ 국가기술자격 응시 ↑

산업인력공단 전년비 32% 증가 제과·제빵, 미용, 조리 등 인기

제과나 제빵, 전기, 건축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따면 창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2030 세대 일자리와 관련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 수험자들의 국가기술자격 등급별로 보면 대학 졸업 수준의 ‘기사’ 등급에서는 전기, 컬러리스트, 건축 분야의 자격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문대졸 수준의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자동차 정비, 식물보호 분야 자격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 등급에서는 제과·제빵, 미용, 조리 등의 자격이 많이 꼽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2030 청년들 가운데 창업이 목적인 수험자는 1년 전보다 3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빵 분야 준비 중인 청년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원서를 제출한 청년 수험자 131만7504명의 응시 목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이 목적인 수험자가 4만3307명으로 2020년(3만2882명) 대비 31.7% 증가했다.

창업 목적 수험생 중 절반을 넘는 60.5%가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을 통해 준비한다고 응답했다. 32.3%는 독학을 통해 준비한다고 답했다.

자격시험 준비 기간은 수험생의 74%가 3개월 미만이었으며, 3~6개월 19.4%, 6~12개월 3.9%였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491개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출제·시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 특성과 사회적 현안을 분석해 종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관련된 신규 종목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 오존 고농도 시기 맞아 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 사업장 50곳 점검 등 관리

정부가 이달부터 고농도 오존(O3)에 대비,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8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지방(유역)환경

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질소산화물 다량배출사업장 5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을 대상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 사항을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

운 중소기업 40곳과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은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 장비를 투입해 점검한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실외 활동 및 승용차 사용 자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주유, 스프레이 사용 자제 등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도 언론 등을 통해 광고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 고용부, 올 강소기업 1만6655곳 선정

6544곳은 3년 연속 뽑혀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1만6655곳이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강소기업들은 정기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기업과 기업이 직접 신청한 총 4만7309곳 가운데 3만여곳을 추려 선정됐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강소기업은 최근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

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뒤 통과한 기업들이다.

특히 올해 강소기업 중 3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6544곳, 2년 연속은 9296곳이었다.

강소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기업 6599곳(39.6%), 21~50인 이하 기업 6354곳(38.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81곳(62.3%)으로 다수였고, 도소매업 2168곳(13.0%) 등이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사업장 선정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